

네트워크 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4월혁명에 대한 백래시(backlash)의 전개“
: 도시빈민 시위와 ‘사회악’ 담론의 출현 과정을 중심으로

하금철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1960년 4월혁명에 대한 공식화된 기억은 ‘학생혁명’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위의 주축은 도시빈민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년층이 다수였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여럿 발표된 바 있다.¹⁾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전개 양상, 그리고 4월혁명 담론 형성에 도시빈민 시위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4월혁명 관련 기록 또는 구술 증언 등이 학교 단위로 모아져 있는 탓에 도시빈민 시위에 대해 별도의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때문에 도시빈민 시위는 그것의 정치적 목표와 성격보다는 시위의 ‘과격한 양상’만이 부각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1960년 4월혁명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일련의 ‘도시봉기’에 선행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도시빈민의 참여가 시위를 격화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그들의 불만과 그 정치적 함의가 부각되기 보다는, 방화, 약탈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의 익명의 시위대와 같은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이미지만이 더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위들은 흡스봄의 말대로 아직 ‘계급투쟁’이 되지 못한 ‘전(前)정치적’ 현상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²⁾ 그러나 이 시위들을 ‘전(前)정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시위 자체의 결함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글은 4월혁명에서 도시빈민의 시위가 왜 전정치적인 것으로 밀려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권명아의 말을 인용하자면 “혁명에 대한 반동(reaction)의 시작과 끝은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이다.”³⁾ 그리고 이 새로운 범죄는 흔히 연상되는 것처럼 정치범의 형상을 띠기도 하지만, 일상 치안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형상을 띠기도 한다. 일정한 수준의 저항행동을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사회의 정상성의 범주에서 일탈된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이를 공적 담론 내에서 정치적 토론을 통해 공박할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탈적 행동에 대한 치료를 받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범죄의 발생 이후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른 적용을 받기에 앞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게 된다. 이것이 4월혁명에 대한 백래시(backlash)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빈민의 시위의 배경과 그 특성

1) 초기의 시위 전개 양상

1960년 봄의 시위 물결에서 본격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된 것은 3.15부정선거 당일 벌어진 마산에서의 시위부터였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민주당 참관인들이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정치테러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런 행태가 전혀 시정될 기미가

1) 이승원, 「‘하위주체’와 4월 혁명 -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기억과 전망 20호, 2009;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30권, 2010; 오제연,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06호, 2014 등.

2) 흡스봄, 『원초적 반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유럽소외지역 민중운동의 제형태』, 온누리, 1984, 15쪽.

3) 권명아, 「이브의 범죄와 혁명」,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4, 21쪽.

보이지 않자 민주당 지방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선거포기를 발표했다. 민주당 마산시당 역시 오전 10시 30분에 선거포기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다.

마산 시위는 초반부터 도시빈민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가 정리한 『3·15의거사』는 “BBS⁴⁾소속 빈민층 소년들은 휘발유와 현수막 천, 사이다 병 등을 주워와 사제 수류탄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일본 등지에서 온 귀환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포동 주민들 가운데 품팔이와 부두 노동자, 구두닦이, 녕마주이, 흥등가의 여성들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4월 11일 2차 시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2시경 시신이 도립마산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시내 전역에 소문이 퍼져있어서 병원 앞에 격분한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정복경찰들을 뚫고 시체실까지 들어왔다. 학생들은 시체를 끌고 나오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하자 거리로 뛰쳐나와 시가행진에 나섰다. 그리고 이 시위대의 선두에는 마산 직업소녀학교 학생 20여명이 있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시위를 이어가면서 긴급하게 플래카드를 만들어 휘두르고 다녔으며, 전등이 켜진 건물에 돌을 던지며 불을 끌 것을 요구했다. 오제연이 지적한 바대로 도시빈민에게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힘의 행사 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리에 불이 꺼진 밤 시간대는 이들에게 “자신의 언어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다.⁶⁾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도 도시빈민 소년들이 주도하는 시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3월 14일 밤 9시부터 시작된 학생 시위를 주도한 것은 중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균명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 등 10여개의 야간 고교생이었다. 일반적으로 야간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처지가 열악했고, 낮에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밤에 학교를 다녀야 했던 ‘고학생’이었다. 이들은 주로 신문팔이로 돈을 벌었고, 때로는 자신의 피를 팔기도 했다.⁷⁾ 이들은 인사동 입구, 화신백화점 앞, 광화문 네거리, 서대문 로터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100명 씩, 50명 씩 떼를 지어 뼈라를 뿌리고 구호를 외쳤으며, 횃불을 들고 스크림을 짜서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2) 초기 시위 확산의 조건 - 도심부 공간 및 인구 구성의 ‘유동성’과 ‘혼합’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취약했던 도시빈민, 그 중에서도 나이 어린 소년들이 앞장섰던 초기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그 당시 도시 형성의 특성에 주목해 봐야 한다. 마산의 경우 해방 이후 귀환동포들 중 고향으로 돌아갈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항구 주변에 그대로 머물렀고, 한국전쟁으로 피난민까지 몰려들면서 출신 지역별 구성은 더욱 다양해졌다.⁸⁾ 물론 이처럼 높은 인구 유동성은 당시의 많은 대도시가 갖는 특성이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업기반이 붕괴된 지방의 농촌과 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역시 산업기반이 붕괴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원조물자 유통과정 등에 관여되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의 생계수단을 확보할 가능성에서는 좀 더 나았다. 그러나 전후복구를 통한 도시체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인구 유동성·혼합성이 높아진

4)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불우 청소년, 문체·비행청소년과 결연하여 이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청년운동. 1904년 미국 뉴욕에서 BBS운동이 처음 시작된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BBS운동이 펼쳐졌다.

5) 3·15의거사 편찬위원회, 『3·15의거사』, 3·15의거기념사업회, 2004, 297, 305-306쪽.

6) 오제연, 앞의 논문, 147쪽.

7) 오제연, 앞의 논문, 141-142쪽.

8) 차철욱, 「3·15의거의 주체 형성과 권리 상실」, 『한국민족문화』 37, 2010, 371-376쪽.

다는 것은 한 번 시위가 발생하면 도시 전체로 확산될 소지를 품고 있었다.

이 문제는 해방 이후 서울 도심의 변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의 도심부는 일제시기를 통틀어 대체로 대중을 광장으로부터 추방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일제 말기 총동원체제에 접어들면서 조선신궁 광장을 비롯한 일부 광장 공간이 관제 행사를 위한 대중 동원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역시 도심부 광장을 이러한 관제 동원 행사에 적극 활용했다. 이미 관제 동원 행사에 익숙해 있던 1960년 봄의 학생 시위대 역시 이런 도심부 광장을 따라 시위를 전개했다.⁹⁾ 그리고 이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무허가 판잣집 등이 모여 있는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울 곳곳에 창고·판잣집·천막·토막 등 온갖 종류의 불량 무허가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종로와 을지로 등지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다방이 하나 더 생기고 술집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정도로 상반된 풍경도 나타났다.¹⁰⁾ 흡스봄은 “궁전과 대귀족의 저택, 시장, 대성당, 공공 광장과 빈민가가 뒤섞여” 있는 도시의 결합 형태가 ‘폭동을 부르는 초대장’이라고 한 바 있는데,¹¹⁾ 50년대 후반 서울의 도시 공간 조건은 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한편, 초반 시위 흐름 속에서 일부 폭력적이고 과격한 양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주체가 정확히 빈민이었는지 아니면 학생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는 와중에 시위대열 내에서 변진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작한 과격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그것의 발단은 대부분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4월부터 대학생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시위의 과격한 양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학생의 시위는 지식인적 양심으로 비분강개해 일어난 평화롭고 건전한 것으로, 빈민 또는 불량학생들의 시위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우발적인 파괴폭동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3. 학교별 시위의 본격화와 도시빈민 시위의 타자화

당시 한국사회는 전후복구가 지연되고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당시는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속과 신분을 부여하고 국가가 통치 가능한 인구로 파악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¹²⁾ 1960년 3월까지의 시위 확산 흐름은 국가의 ‘가독성의 위기’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은 이러한 가독성의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사회적 소속을 손쉽게 파악 가능한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집단이었다. 물론 학생이라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일반 시민과 크게 다를 게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1954년부터 중앙학도호국단이 학생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여 행동을 규제하고자 착용케 한

9) 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 1950~6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광장정치」, 서강인문논총 38, 2013.12, 95-100쪽.

10)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 이야기 1』, 한울, 2010, 78-80쪽

11) 흡스봄, 『혁명가 - 역사의 전복자들』, 길, 2008, 294쪽

12) ‘가독성’이라는 표현은 제임스 스콧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국가가 통치를 위해 공간과 사람을 읽기 쉽게 만든다고 하는 뜻이다. 제임스 스콧,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교복과 교모였다. 이는 4월혁명의 거리에 나온 수많은 시위 참여자 중 오직 학생들의 결집만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¹³⁾ 애초에 교복과 교모는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이를 수용하는 학생 스스로와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문화적 구별짓기의 장치로 기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짓기는 4월에 들어 각 학교를 단위로 시위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담론 공간 내에 자리 잡게 된다.

1) 4월 12일 마산 고등학생 시위

김주열의 시신 발견으로 촉발된 4월 11일의 2차 마산 시위는 자정을 넘겨 12일 0시 40분경에 마무리되었다. 여러 기록을 통해 미뤄볼 때, 이때까지의 시위는 대체로 학생과 일반 시민의 구분 없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BBS 또는 직업소년학교 학생들이 과격 시위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으나, 경찰의 살인적 폭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이는 다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시위는 12일 오전 10시에 재개되었는데, 이 때의 시위는 각 고등학교 단위로 조직되었다. 첫 발을 댄 것은 마산공고 학생(3~500명 추산) 시위대였다. 그러나 시위는 “비조직적인 난동은 희생자를 낼 뿐이니 정연한 질서유지를 부탁한다”는 교장의 요청대로 교사들이 시위대의 앞뒤를 호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산공고 시위대는 오후 1시 25분경 학교로 돌아와 교장의 제의대로 한 시간 수업을 받았다. 이렇게 조용히 끝날 것 같았던 시위 분위기는 마산공고 시위 소식을 들은 타 학교가 오후부터 시위에 나서려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교사들은 ‘질서유지’를 전제로 시위를 허락했고, 학생들 역시 교사의 지시에 대체로 잘 따랐다. 오후 4시경 대부분 학교들의 시위는 해산했다.

마산 고교생들의 시위는 전날 과격한 시위 양상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전히 학생들의 질서외식의 발로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날 경찰 당국 역시 전날의 유혈 사태를 크게 의식해 진압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오전 11시 40분 이정용 경남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8백여명의 경찰관들이 증원되었으니 앞으로의 치안확보는 염려 없을 것”이라면서도, “물매를 맞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발포나 구타 등을 못하도록 엄중지시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⁴⁾ 실제로 경찰은 학생 시위대에 별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12일 낮의 분위기는 경찰과 시위대 모두 전날의 유혈 충돌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 한 덕분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날 시위의 시발점이 된 마산공고 시위가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은 타 학교로 흩어져 시위를 선동했다. 오후 시위는 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학교단위 시위는 오후 4시경 해산했지만, 저녁 무렵에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 앞에 5천여명의 시민이 다시 집결해 시위 태세를 갖췄다. 여기엔 당연히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국의 통행금지 명령이 오후 7시로 당겨졌음에도 시민들은 7시 이후로도 계속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시내 곳곳을 행진하며 파출소, 경찰서 등에 투석해 유리창을 파괴했고, 소방차, 트럭, 지프 등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통금 시간 이후 시위는 분명 학교단위의 낮 시위와는 달리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낮 시위가 더 온건했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시위 분위기가 학생들의 낮 시위 과정에

13)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공간SAI 제9호, 2010, 23-24쪽

14) 마산일보, “발포 구타 않는다 리 경찰국장 시민에 호소”, 1960.04.13

서 다시 예열되다가 밤 시간에 다시 폭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밤 시위의 주요한 참여 주체였다.

그러나 4월혁명 이후 한 달 만에 현역기자들의 글을 모아 출간된 『4월혁명 - 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에서는 이날 낮 시위와 밤 시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낮 시위에 대해서는 “양의 떼와 같은 그러나 울부짖는 어린 학생들의 시위”라고 표현했고, 저녁이 되자 “학생들은 제집으로 돌아가고 방관만 하고 있던 시민들이 그 뒤를 이어 데모를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¹⁵⁾ 11일에 전개된 시민들의 목숨 건 시위에도 불구하고, 12일 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그 전까지 방관하고 있던 이들로 호명되었고, 낮 시위=학생, 밤 시위=일반시민(도시빈민)이라는 부당한 전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점이 바로 이 때였다.

2) 4월 18일 고려대 시위 이후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4월의 시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 시점은 4월 18일 고려대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정치깡패들이 시위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부터였다. 18일 오후 1시경에 모인 3천여명의 고대생은 형사들이 가로막고 있던 교문을 쉽사리 통과한 후 큰길을 막고 있던 백차도 밀어내고 행진해 나갔다. 이들은 신설동을 거쳐 종로로 진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수차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경에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 앞에 당도했고, 연행학생 석방과 폭행경찰 처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문제적인 것은 의도적으로 시위 와중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대학생과 구분 지으려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런 발언은 시위 해산을 설득하기 위해 나타난 유진오 고려대 총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 농성 학생들 앞에 나타나 연행된 학생들을 인계받기로 서울 시경국장 및 내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약속 받았으니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시위하는 동안에 폭행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¹⁶⁾ 앞서 학생들이 행진해 오는 과정에서 술하게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음에도 이렇게 말한 것은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 총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게 학생들의 행위를 폭력과 구분 짓는 말을 했다. 특히 이날 밤, 정치깡패들의 테러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 1천여명이 고려대학교 강당을 점거하여 무장기동대화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각 대학 총장 긴급회의석상에서 “이날 밤 강당을 점령한 데모대 속에 학생은 섞여 있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¹⁷⁾

경찰의 살인 진압과 시위대의 극렬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19일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이러한 대비는 더 극에 달한다. 학생들의 시위는 “학생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하고 대렬은 결사적인 전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경찰방어선을 뚫고 2만여명의 학생이 노도와 같이 경무대쪽으로 밀려 들어갔다”처럼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반면 학생 외의 소년들의 경우 “이무렵 데모대에 섞였던 남루한 의복을 입은 청소년 약 3천명이 갑자기 중앙청 돌담을 뛰어 넘어 문교부와 부흥부 청사를 마구때려 부수는 한편 부흥부 앞에 세워놓은 차량 10여대를 부수어서 엮어놓고 뒤뜰에가서 문교부장관차등 6대를 파괴하였다. 완전히 폭력화한 이들은 「중앙청등사실」을 부수고 수만매의 종이를

15)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4월혁명 - 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창원사, 1960, 60-65쪽.

16) 동아일보,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1960.04.19

17)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104-106쪽.

뿌려 던졌으며 문교부 「영화검열실」도 때려엎었다.”와 같은 난폭한 이미지로 그려냈다.¹⁸⁾ 심지어는 일반 소년들의 시위를 다음과 같이 다분히 조롱조로 묘사하기도 했다.

깡패를 동원해서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고대 학생을 습격한 것은 크나큰 계산 착오였다. 그 이튿날 전 학생이 들고 일어났고 일부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그 속에 불량소년들도 한몫들었다. 질서 정연한 데모 대원 속에 낀 불량소년들이 데모대원들 못지 않게 용감하였다. 차림 차림이 깡쟁이 도매상에서 나온 듯한 소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꼴이란 정말 가관이다. 파출소를 부수고 경찰서를 부수고 한 무리들의 대부분은 순전한 이들 불량소년 대부분이 한 짓들이라고 보아야 할 듯.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데모를 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충격을 받기 전에는 참으로 대견한 것이었다. 불량소년들의 돌팔매질과 방화는 평소에 받은 경찰의 학대를 보복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이 아닌지...¹⁹⁾

3)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선언 이후

시위가 여러 대학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25일에는 대학교수단 시위까지 일어나자, 결국 이승만은 26일 오후 1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야 선언이 시위대의 흥분 상태를 곧바로 가라앉히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하야 소식은 시위대의 승리와 해방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탈취한 버스와 택시에 나눠타고 거리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시내 곳곳을 가득 메웠다.

또한 시위대는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기붕 부통령, 선거장관 최인규 의원 등의 집을 공격해, 집안의 집기들을 모두 꺼내고 소각했다. 특히 이기붕의 집에서 시위대 5~60명이 “실내에 난입하여 호화찬란한 가구와 장식품을 하나씩 하나씩 들고 집앞 전차길에 나와 성냥을 그었”고, “하다못해 사진 한 장이라도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²⁰⁾ 이처럼 시위대는 상당히 난폭해졌지만, 그 와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해두었다. 그것은 집기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내 훔쳐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부랑배’로 호명되었다. 심지어 “데모대는 그중에 낀 부랑배들이 가구 등을 훔쳐 가려 하면 주먹으로 때리면서 까지 일일이 빼앗아 불터미에 내던졌으며 어떤 청년 한명은 일본도를 빼들고 「우리는 노략질을 해서는 안 된다. 훔쳐가는 놈은 죽인다!」고 칼을 휘둘르기도 했다.”²¹⁾

한편, 이날 오전 한양대학교에서 총궐기를 논의하던 27개 학생대표들은 대통령의 하야 성명 소식과 시내의 혼란상황을 접하고 질서유지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전환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에게 질서를 호소하는 한편, 과격한 시위대원들이 타고 폭주하는 차량을 회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다.²²⁾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일부 ‘부랑소년’들이 차량시위를 계속하자 대학생들은 “질주하는 자동차를 다른 차로 가로막고 그 부랑소년들을 능지가 되도록 때려주어 딱금한 맛을 보여주었다.”²³⁾

18)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91쪽.
19)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279-280쪽.
20)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131-133쪽.
21)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같은 면.
22) 조화영 편, 『사월혁명투쟁사』, 국제출판사, 1960, 169쪽.

마산에서는 부산에서부터 차량으로 이동해 온 이른바 ‘원정시위대’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마산 일대를 휩쓸면서 마산시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등을 파괴했다. 일부기록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주먹을 쓰는 깡패, 건달, 양아치, 구두담이, 행상인이 태반이었으며, 이밖에도 흥등가의 여인, 품팔이, 노동자도 더러 끼어있었다”고 적고 있다.²⁴⁾ 이는 원정시위대의 성격을 온전히 학생 외의 빈민층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는 “경남고교 학생 100여명은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원정시위를 하러 마산으로 향하였다.”라고 적고 있어 원정시위대에 학생도 끼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과격한 행동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날 질서유지 목소리가 대학생으로부터 제기된 것은 좀 다르게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6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시위대 내부에서 제지되는 일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 받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승만의 하야 선언 하나만으로 갑자기 더 이상 시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 대학생만의 자의적인 정세 판단일 뿐이었다. 당시 대학생 일반이 가진 이념은 그다지 정교한 것이 아니었고, 시위 과정에서 표출된 주장 역시 경찰 폭력에 대한 규탄과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이에 기반한 자의적 정세 판단으로 질서회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곧 ‘부랑청년’ ‘부랑배’ ‘불량소년’ 등으로 규정지었다. 사실상 이때 대학생은 경찰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²⁶⁾

4. 4월혁명 이후, 도시빈민은 어떻게 ‘사회악’이 되었는가?

1) ‘4월혁명으로 인한 범죄 증가’ 주장에 대한 재검토

혁명 이후 1년간 쏟아져 나온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살펴보면, 혁명 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우려를 담은 보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과도정부 하에서 4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강도 및 절도 사건이 8,500여건이 일어났고, 1960년 8월 현재 발생한 강도 사건은 170여건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총 강도 건수 167건보다 많은 수라고 보도되었다.²⁷⁾ 마산에서도 1960년 9월 현재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가 400여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역시 전년도 전체 발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다.²⁸⁾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판사였던 권순영은 “4월의 정치적 변동은 물론 학생 기타를 포함한 소년층의 공격성향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폭력범과 ‘깡패’단의 조형을 증가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²⁹⁾

그러나 이렇게 제기된 우려들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4월 혁명 이후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언급들은 대개 혁명 전후 4개월간을 비교하거나 바로 전년도 통계

23)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298쪽.

24) 3·15의거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425쪽.

25) 『국제신보』 1960. 4. 27 석3면 ; 조화영 편, 230-231쪽

26) 실제 대학생은 치안권을 행사해 양동 일대에서 깡패를 소탕하고 우범소년 15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작년의 오늘] "나 이승만은...대통령직을 사임" 대학생은 치안권반환”, 1961.04.27

27) 조선일보, “강·절도 팔천오백건”, 1960.08.21.

28) 마산일보, “범죄통계”, 1960.09.16.

29) 권순영, 「한국에 있어서의 소년범죄」, 저스티스 5(1), 1961.12, 4쪽

와의 비교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범죄 추세를 비교해보면 조금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소년범 문제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서울지법 당국은 1959년 9월부터 1960년 8월까지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 10,084건으로 이 중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12%인 1,18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전한 기사에서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소년범의 실태를 여기서도 엿 볼 수 있어 당국은 물론 지도층의 각성이 간절히 요망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1909년부터 1942년까지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수형자 연령별 변동 추이를 분석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미성년범죄자는 평균 10.257%를 차지하며, 증감비율도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³⁰⁾ 따라서 12%라는 수치는 그간의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했을 때 그리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권순영 판사의 경우에도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서울지법 소년부지원에서 처리한 범죄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60년의 소년범죄건수(7,734건)가 1959년(5,785건)에 비해 늘기는 했다. 그러나 1956년도까지 1천여 건 수준이었다가 1957년도에 갑자기 폭증해 1958년도에 정점(9,406건)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1960년도의 수치는 감소한 것이다.

범죄 증가의 우려를 담은 당시의 기사나 글에서 주된 타겟이 된 집단은 늘 “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중퇴한 자들”³¹⁾이었다. 그러나 실제 범죄 단속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에게는 엄연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례로 1961년 서울 세종로 일대를 무대로 활동했던 깡패조직 ‘이빨단’의 경우 그 규모가 208명에 달했는데, 두목 민경주(21세)를 포함해 다수의 단원들이 대학생이었고, 그 외 단원들도 시내 일류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이들은 총 5단계에 걸친 뚜렷한 상하조직망을 갖추고 있었고, 대부분 단도를 지니고 다니며 남녀학생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을 일삼았으며, 일대 음식점에서는 무전취식을 하는 상습범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기사는 이들을 ‘순수한 학생’으로 호명하고 있다.³²⁾ 이런 인식은 5.16 이후 정비된 청소년보호정책에서도 넘겨주어, 구두담이 등 도시빈민 소년들을 타겟으로 삼는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반영되었다.³³⁾

2)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행하는 치안대책

당시 여러 신문 기사들은 도시빈민이 쉽게 ‘사회악’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들이 실제의 도시빈민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언설들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닳칠 범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예측 또는 예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치안대책을 강구해 향후 범죄 빈도의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즉, ‘실제의 범죄 위험 강조 → 범죄 확산의 예측/예언 → 치안대책을 통한 범죄 감소 목적 달성’이라는 과정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경보시스템’이 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빈민층 소년들의 범죄 발생에 대

30)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석사논문, 2015, 14-16쪽.

31) 권순영, 앞의 논문, 4쪽.

32) 민족일보, “깡패, 이빨團, 수사”, 1961.04.03. 실제로 많은 경우 깡패 사건의 범행 집단은 학생과 비학생이 혼합된 혼성집단이었다. 마산일보, “학생 깡패가 수도록 교외지도반 있으나마나”, 1960.12.21.; 마산일보, “어처구니없는 학생깡패 금품갈취의 소행?”, 1960.08.07

33) 유진, 「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불량아·우범소년」, 사회와역사 제 123집, 2019, 99-102쪽

한 예고/예언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측 부재가 재앙이 되는 자연재해의 경우와는 달리, 범죄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서 재앙적인 것은 예측의 출현이다. 즉, 예측을 미리부터 진실로 전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치안대책이 뒤 따라 오면서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³⁴⁾ 다시 말해서 자기충족적 예언이 진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감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과시적으로 검거 건수를 늘려야만 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1960년도에 서울시내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된 인원이 8월까지만 해도 7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중 80%는 4.19 이후 잡혀온 인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던 6월 9일 단속에서는 하루만에 561명의 부랑아가 잡혀 들어왔다고 한다.³⁵⁾ 당연히 6월 9일 하루에만 유독 불량행위를 하는 아동이 많아진 탓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불량소년이라는 범주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치안 당국의 단속행위를 부추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5.16 이후 군정이 추진한 국토건설사업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애초에 실업자와 절량농가 구제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국토건설사업은 군정 등장 직후 폭력배, 깡패 등의 일제단속으로 검거된 자들을 동원하여 ‘구악과 사회악 일소’라는 군정의 혁명공약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변화된다. 군정은 권력을 잡자마자 전국에서 약 1만명의 깡패를 검거하여 그 중 두목급 깡패와 악질적인 자는 군재에 회부했고 그 외는 국토개발사업장과 탄광 등지로 보냈다.³⁷⁾ 그런데 이듬해 법무부가 내놓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문건에 따르면, 1961년 5월 16일부터 1962년 5월 30일까지 총 1년여 기간 동안 단속된 폭력사범은 18,993명이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단속한 인원의 절반이 넘는 1만여명을 단 보름 내외의 기간에 검거했다는 것이다.³⁸⁾ 이는 다분히 과시적인 단속이며 ‘사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후적인 단속을 통해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단속된 인원 중 실제 국토건설사업장에 투입된 인원은 최소 3,137명에 달한다. 그런데 폭력배들을 동원했다는 군정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직업은 약제사, 식당주인, 학생, 전직교사, 연예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61년 12월 13일에 ‘폭력행위자등 단속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지검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하는 대신 국토건설사업장 취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³⁹⁾

5. 맺음말

(추후 보완 작성 예정)

34) Stanley Cohen,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Rockers*, Routledge, 1972[2002], p.35

35) 경향신문, “서울을 떠나는 꼬마 이민열차”, 1960.08.24.

36) 한편, 이즈음 ‘4.19 의거 학생대책위원회’는 자진해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아이크환영준비 학생위원회’(‘아이크’는 아이젠하워의 애칭)를 구성해 활동했다. 천정환 외, 혁명과 웃음 - 김승옥의 시사만화 <파고다 영감>을 통해 본 4.19 혁명의 가을, 엘피, 2005, 119쪽.

37) 마산일보, “檢擧된 깡패 萬名”, 1961.06.06.

38) 유진 외,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2, 159쪽.

39) 유진 외, 위의 보고서, 154-158쪽.